

[종합·해설]

“위증 안했다면 이 前시장 구속됐을 것”

김유찬씨 “위증 대가로 1억여원 받았다”

이명박측 “허위 날조” 박근혜측 “직접 해명을”

금품수수 내역서도 공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전 시장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지낸 김유찬씨는 21일 폭로 기자회견을 강행했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측은 이 전 시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김씨의 폭로가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이 전 시장 검증 과정에 대선 가도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유찬 폭로=김씨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은 9천여만원 밖에 안되는 선거 비용의 수십 배를 상회해 지출했고 위법 사실은 폐할 목적으로 나를 해외로 도피시킨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면서 “내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품수수와 관련,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 대가로 1억2천50만원을 나눠 받았다”면서 “이 전 시장 측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 김유찬 폭로 쟁점별 입장차

	김유찬	이명박 전 시장측
위증교사 및 금품수수 권리	96년 11월부터 20차례 걸쳐 위증의 대가로 5천500만원에서 수백만원 등 총 1억2천여만원 금품수수	금품지급자로 지목된 이광철 당시 비서관은 96년 11월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거짓
3억원 요구설	96년 폭로 기자회견 대기로 당시 종로선 거구에 출마한 이종찬 국민의 부총재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는 별도입장을 이전 시장측에 의한 위증	김씨가 캐나다 도피에서 귀국후 검찰에서 3억원 허위교사 주장에 대해 “김씨는 외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곳에서 연행된 뒤 검찰에서 본인이 3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전 시장측과 접촉할 물리적 기회가 없었음”이라고 말해 당시 이 사건 수사검사와 변호사였던 같은 당
배후설	정인봉 변호사 및 박 전 대표측과 어떤 연관도 없음	정인봉 만의 출출 행동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설득위험	지난 98년 민선구청장 출마를 앞두고 당시 제3자 회답을 통한 설득위험	지난 2002년 본인이 준비한 자료에 따른 훈계를 들었다고만 기재돼 있으며 장소도 다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가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에 대한 추가 의혹과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또 96년 9월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폭로 기자회견 당시 이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측과의 3억원 거래설도 “위증이었다”면서 이 전 시장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액수와 수수날짜, 금품 전달자 등의 명단을 담은 금품수수내역서, 이 전 시장 측이 건넸다는 위증 교사를 위해 법정에 상질문지 등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어 “이 전 시장이 나에게 돈을 건네 3명 중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당시 종로 구청장 간부 J, K씨에 대한 강력한 입단속에 나섰다”면서 “이 전 시장 측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 이 전 시장 측 반박=이 전 시장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반박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면서 “김씨가 제시한 녹음테이프도 옛날 1차 폭로회견 당시 것이 아니라 어제 밤에 급하게 녹음한 것이다, 내용도 김씨의 유도성 발언으로 일관돼 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이광철 전 비서관은 구속수감돼 있어 돈을 건넬 수 없었다”고 말한 뒤 ‘이종찬 3억원 허위교사’ 주장에 대해 “김씨는 외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곳에서 연행된 뒤 검찰에서 본인이 3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전 시장 측이 교사할 사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박 전 대표 측 공세=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이 전 시장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직접 대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건 관련 핵심증인이 당시에 있는 만큼 이들이 사실을 밝히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해 당시 이 사건 수사검사와 변호사였던 같은 당

주성영 의원과 양인석 변호사의 공개 해명도 아울러 요구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이 전 시장 측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표를 거론하며 ‘짜고치는 고스톱’, ‘배후설’ 등을 언급한 정우연·강수희·주호영 의원 등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현대건설 재직 당시 회사 측이 이 전 시장의 특별상여금으로 이 전 시장 명의로 서초동 토지를 사뒀다는 보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신동아’는 ‘이명박 재산’은 소재 면에서나 구도 면에서나 최대 검증 대상”이라면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꽃마을 투기 논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땅 1313평 은닉 논란 ▲처남관련 두 회사(건설회사, 다스) 및 김경준 사기 사건 연루 논란을 3대 검증 포인트로 꼽았다.

이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법조타운 예정지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불이 한창이던 지난 1977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1번지 등 당시 빈민촌이었던 ‘서초동 꽃마을’ 인근에 4건의 부동산을 매입해 이 중 2건을 93년에 매도했다. 보유 중인 부동산 2건의 현재가는 매입가의 114~13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는 1990년대 초 이명박·노재봉·김문기·나웅배·한석재·박세직·장석화·강수립 등 당시 여야 국회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근동씨 등이 법조타운 예정

지 주변에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실

신동아는 이와 함께 이 전 시장의 강남구 도곡동 땅 1313평 처남 명의 은닉 논란도 보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깊고 풍부한 맥주의 참맛!



광전발연 이르면 6월께 분리

전남도 광전발연 승계…광주시 법인 신설 합의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분리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광전발연)은 빠르면 오는 6월께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으로 각각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전발연은 최근 실무위원회를 갖고 도가 광전발연을 승계하고, 시는 법인 신설을 통해 광주발전연구원을 발족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 구원으로 문을 연 이후, 1995년 6월 광주와 통합운영을 시작한 광전발연은 12년 만에 다시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되돌아간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전발연은 오는 3월 말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연구원 분리 안건을 상정해 최종 확정하고, 시·도별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전발연 전체 출

연금 230억원 가운데 시·도민 80억원을 기반으로 별도의 기금을 주가해 광주발전연구원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른 광전발연의 전격 분리에 대한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광전발연 연구원(13명)은 일단 시·도 연구원으로 분리·배치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구원 전원 고용승계는 시·도지사의 약속 사항이므로 지켜질 것”이라면서 “연구원의 근무처는 진공과 연구실적 및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도가 연구원 전원 고용승계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연구원 개개인은 시·도 어느 연구원에 배치할 것인가도 미정이다. 또한 연구원 중 해양과 농촌 분야 전공자 4명을 제외한 9명

이 전남발전연구원과 새로 발족하는 광주발전연구원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시·도는 광전발연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새로운 전문인력 충원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어 기존 연구원 고용 승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연구원 기획연구실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연구원 분리 추진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설 연구원 관련 인력 및 지분은 설립등기와 동시에 일괄 인계·인수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연구 자료와 비품 등을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광주는 4~5월 중에 법인 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규정, 조례 제정을 거쳐 빠르면 6월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용화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첨단산업 도시임을 내세워 유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시는 특히 경제성이 이미 입증된 지하철 2호선 구간 중에서 시범노선을 선정해 평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중 사업공고를 한 뒤, 5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아 6월 중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에 맞서 선정평가 기준이 확정·공고되면 ‘자기부상열차 실

광주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나서

인천·대전·대구와 4파전…건교부 6월중 확정

광주시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광주시는 21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생원에서 작성한 평가 기준에 동의하고 시범노선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달까지 참여 의향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인천·대구·부산·창원 등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광주시는 관객적인 여건상 인천·대전·대구 등과 4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사업 유치에 나서 사업비 조달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며, 대구는 자기부상열차 개발회사인 (주)로템과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기부상열차사업단’이 지역에 있어 경쟁력 있는 상대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맞서 선정평가 기준이 확정·공고되면 ‘자기부상열차 실